

시론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최근 발표된 한 통계가 광주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5개년(2013~20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자살 사망자 중 청년(19~3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이 약 15%니 높아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20%를 상회한 도시도 광주가 유일하다. 아동기 자살자는 울산이 전국 1위, 광주가 2위를 기록했다. 광주가 아동기, 청년기 모두 1, 2위를 차지했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2018년, 2019년 자살 통계에서는 광주시 청년 자살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전국 3위정도 수준이니 사태의 심각성이 가늠되지 않다.

광주의 청년들은 왜 그토록 많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가?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삶을 포기하는 도시에서 민주,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일은 또 얼마나 곤란한가? 아이러니하게도 전국 어느 도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기간에 광주시는 문화도시, 인권도시에 덧붙여 ‘청년도시 광주’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를 브랜드화 하여 홍보하고 있다. 말과 현실의 간극이 지나치게 클 때 그 균열을 메우는 전형적인 방법은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거짓 환상을 만들거나, 균열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현재는 나아지고 있으니 괜찮다’라거나, ‘잘 대처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식의 대응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정말 안심해도 될까? 최근 광주시가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삶의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2021)를 보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경험한 광주 청년은 24%가 넘는다. 광주 청년인구가 약 41만 명 정도이니 약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6%는 소득이 줄었으며 30%의 광주 청년은 빚이 늘었다. 대계가 생활비, 주거비로 쓰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청년 중 17%가 실직했다고 발표했다(2020). 광주 청년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잔혹함은 전 세계의 평균치를 상회한다.

재난은 복합적, 연쇄적이고 총체적이다. 광주 청년의 60%가 코로나19로 인해 고독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고졸 청년(73%), 미취업자(69

%)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60%는 현실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광주 청년의 13%는 코로나19 여파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3%. 역시, 고졸 청년(20%), 미취업자(20%)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평등할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불평등하다. 특히 불평등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그 공격력은 약한 고리에 집중된다. 학력과 직업에 따라 피해는 더 집요해진다. 문제는 회복의 시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상관없이 청년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위기의 극복보다는 부정, 환상, 무시한 방법을 선택해왔다. 이미 지난 2020년 11월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청년에 산의 삭감에 반대하면서 예산 확보와 함께 긴급한 코로나19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청년단체와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긴급한 코로나19 대책 수립은 재차 강조했다. 이후 한참의 침묵 끝에 비로소 올해 5월,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청년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은 놀라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해왔거나 미리 계획된 사업이었다. 빈 껌대기를 들고 마치

새롭고 긴급한 대책인 듯 발표한 것이다. 민망함은 누구의 몫인가.

그리고 현재, 광주시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광주시의 코로나19 청년 대책이 몇 가지 공개되었다. 대책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이 대책을 집행하는 시기는 2022년 초이다. 느긋한 말의 속도는 긴급한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나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피해 대책이 실시되기까지 광주시는 딱 2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청년 피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은 선제적인 대응(3월) 이후 실태조사(12월)를 선택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작년 12월 서울시는 서울청년들에게 “코로나19 속 청년,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광주는 왜? 코로나19가 광주에는 2022년에 도착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 청년의 삶이 광주 청년의 삶보다 2년 더 긴박하고 위중한 것인가?

광주 청년의 44%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소비축소’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의 위기를 어떻게든 ‘혼자’서 견디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각자 알아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청년도시 광주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는 과연 양립 가능할까? 누군가는 하나를 부정하거나, 환상을 품거나, 양립자체를 ‘무시’할 것이다.

社說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새로운 변화 기대한다

문화수도 광주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해서 기대가 크다. 기존 제도와 관행의 과감한 개선, 문화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권리 증진 등 3대 정책 13개 과제가 그것으로 민관협력 행정 모범사례로도 평가받는다. 시는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토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개선안은 획기적이다. 먼저 통합공모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 행사를 위한 대관, 스텝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연말 본예산 확정 시 익년도 사업 공고를 하도록 앞당기고,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공연예술 참여 사례비 편성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실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년 단위 창작 지원사업을 준비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보듬 소통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광주는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문화예술인의 위상이 이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돼왔다. 따라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주간을 운영하는 등 행보가 주목받았다. 특히 이를 통해 이른바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이 제시됐고 발빠르게 후속조치에 들어가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인들이 창·제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광주시는 문화재단, 민간전문가로 심무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에 최종 성과물을 도출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없는지 더 살펴볼 길 바란다. 더불어 향후 구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개선도 해야 한다.

예술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문화수도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 또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창의성과 상상력의 산물이다. 시대적 가치, 세계관, 비판적 사고까지 담아내 자신은 물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든다. 문화예술의 본고장, 예향 광주의 미래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 취약계층 재산세 감면 조치 지속돼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취약계층이 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조정해 달라고 거리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전남도가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는데 올해도 523명에게 재산세 1억2천만원을 감减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해 2월 전주 한옥 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발적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11만명에 대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

를 지원했다.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관공속박·여행업 등 영세기업은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감면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한 톨이 아니다. 전남도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과 납세자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추석 명절 긴급 민생지원대책도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으로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을테고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하는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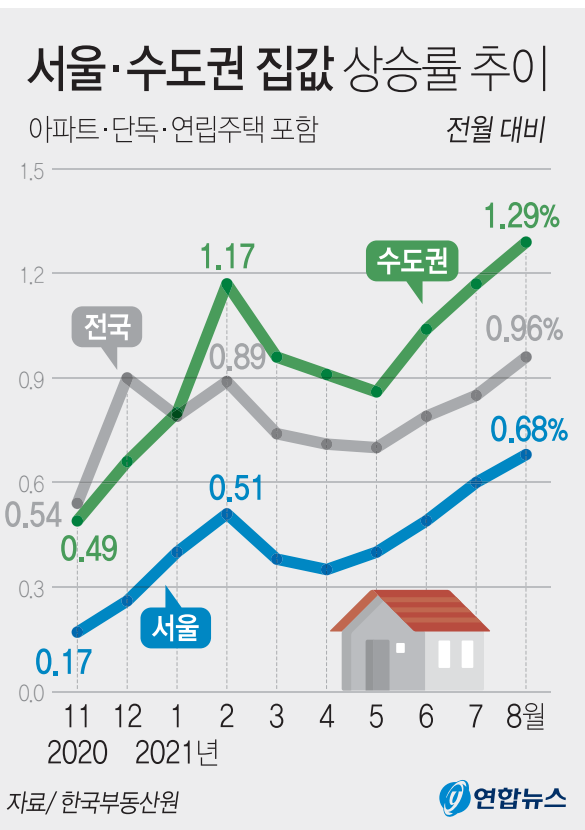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최고 상승...경인 상승률 서울의 2배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전셋값 역시 지난달 경기도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1.29% 올라 전월(1.17%)보다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49%→0.66%→0.80%→1.17%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3월 0.96%, 4월 0.91%, 5월 0.86%로 3개월 연속 오름 폭이 줄었다.

그러나 6월(1.17%)과 지난달(1.29%)에도 상승 폭이 커지며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7월 0.60%에서 지난달 0.68%로 상승 폭을 키우며 작년 7월(0.71%)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1.52%→1.68%)와 인천(1.33%→1.38%) 집값 역시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인천의 집값 상승률은 모두 서울의 2배를 넘겼다. /연합뉴스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 1석3조 효과

대한민국 유치를 전 세계에 선언했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약속을 보다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선언이다.

COP는 197개국 국가수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기후책임당사자 2~3만명이 2주간 모여 기후 대응을 논의하는 최대 규모 국제 회의다. 우리 구에 익은 리우환경정상회의,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이 총회 결과물이다. 5개 대륙이 매년 순회 개최하는데 올해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회의가, 2023년 28차 회의가 아시아 대륙에서 열리게 된다.

문 대통령이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하자 인천시, 경기도 고양시, 제주도, 부산시 등 대도시들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왜일까. COP 규모가 주는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이다. 일약 유명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를 갖겠다는 이유 만으로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이다.

이에 반해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의 명분과 진정성은 매우 뚜렷하다. 남해안남중권은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그리고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고성 총 12개 시·군 협의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치 선언이 있기까지에는 바로 남해안 남중권 시·군민들의 시의적절하고도 절절한 유치 노력이 있었다. 2008년 전남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에 첫 제안을 한 후 13년 간 끊임없이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2018년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상생발전 정책협약으로 채택하도록 견인했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남 그린뉴딜 선도정책과 맞물려 드디어 대한민국 유치가 시작된 것이다.

COP개최는 남해안남중권에서 선택이 아닌 필연적 번복점이 돼 있다.

첫째, 여수화석산단,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국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이며 연안 침수,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 이슈가 분명한 지역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RE300) 구축 선도, 탈석탄 동맹 가입, 유엔기후변화협약 Race to Zero 캠페인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탄소 사냥꾼 운동, 탈 플라스틱 실천 운동 등 개최 지역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숙원인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에 큰 지렛대가 돼 줄 것이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행사를 통해 소외된 남해안 지역은 수도권과 경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비대해 탈 많은 수도권보다는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남해안 지방에서, 그것도 동시에 걸친 수도권시들의 공동 개최가 또한 ‘COP정신’이기도 하다.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최소 올해 말 개최지가 결정돼야 2년간 성공적인 개최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엔에 유치 신청을 할 때 개최지역을 먼저 정해야 한다. 소중한 준비기간을 개최 지역을 정하느라 소모적 경쟁과 시간을 보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여론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추석 연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서명대에 서명하고 친지들과 고향 소식으로 회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 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할 비수도권 발전, 동서 상생 화합 발전 속 원 실현, 1석3조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추석 선물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과연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먼저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처리해왔던 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가정폭력 등에 관한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하는 제도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 분장

을 한 것으로 현재 경찰업무와의 차이는 거의 없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 치안 관련 업무를 협업 처리해 기존보다 더 좋은 효과 창출이 가능해진다.

한 예로 지역 주민의 비행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요청 시 관보로 유관기관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동 대응이 가능

하다. 해남경찰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경찰, 군청, 교육청 관련 부서들과 함께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감담회를 통해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독자투고



부철민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낮 밤으로 날씨가 서늘해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음을 느낀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7월1일 정식 출범하고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